

비례대표 줄줄이 구속... 야권 '긴장'

이한정 6억, 양정례 15억 등 거액 차용 밝혀져 "야당 탄압" 주장속 일부선 지도부 책임론 대두 檢, 이한정 이어 '주가조작' 정국교 당선자 구속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되면서 야권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검찰은 통합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가 각각 10억원과 15억원, 6억원을 담에 빌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돈 공천' 의혹에 대한 수사법위도 넓힐 태세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된 18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이어 2명으로 늘었고, 이날 역시 영장심사를 받은 김일운 친박연대 경북 경주 지역구 당선자에 대한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야권은 이같은 검찰수사를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조만간 입을 닳춘 채 수사의 확대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주도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손학규, 친박연대 서청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이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 송영길, 서갑원, 강기정, 김동철 의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누가 봐도 비례대표 공천이 잘못됐다. 지도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정국교 당선자도 이 정도 됐으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일단 정 당선자 '변호'에 주력했다. 정 당선자도 "억울하다", "무혐의가 확실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박홍수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언급, "비례대표 문제에 있어 다른 당처럼 지도부 책임론을 들어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향후 대응이 결정될 것

이며 제명 내지 출당 등의 조치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당으로서 내심 정 당선자 처리를 놓고 고심스러워하는 표정도 읽혀진다. 특히 정 당선자가 손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박연대측은 이한정 당선자의 구속 여파가 친박연대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과동의 도화선이 바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서 대표의 사무실과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의 경우 이한정씨로부터 450만원을 특별당비로 받았을 뿐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이씨가 6억원을 담에 빌려줬다고 진술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총선준비에 들어가면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당체(일명 창조한국당 사랑채)를 발행했는데 이씨가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뒤인 3월말, 지인 두 사람에게 권유해 각각 4천만원과 5억5천500만원 어치의 당채를 사도록 했다"며 "당 계좌로 입금됐고 공중까지 된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조한국당, 대법원에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檢 이한정씨 '공천헌금' 포착 계적추적

창조한국당은 22일 학력·경력위조 및 전과기록 누락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조한국당은 "이씨의 전과기록을 알았다면 공천했을까가 없다"며 "잘못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것은 이에 제출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박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소장에서 "경찰서의 착오로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행사 등 징역형 전과가 누락됐고, 이씨는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제출해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탈락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당선무효를 주장했다.

선거법상 학력이나 경력위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돼 있어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서류를 보니 전과가 없기에 사면복권된 것으로 알고 기분이 좋았다"고 해명했으나 선



창조한국당 고영배 총무팀장과 이준영 공보팀장이 22일 서울 대법원 민원실에서 이한정 당선자 당선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범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 공표와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가 공천대가로 불법 정치자금(공천헌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호남 vs 비호남' 신경전 고조

당선자, 수도권 27 호남권 25 충청권 8명 재편 6월 전대 앞두고 '투 톱 역할 분담론'도 고개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민주당 내부에서 당내 주도권을 놓고 호남권과 비(非)호남권 출신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통합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6월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 등을 둘러싸고 물밑 리더십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당 논란을 고리로 '호남 뿌리론'과 '전국 정당화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9 총선 당선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출발하고 있다.

4·9 총선 당선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27명, 광주·전남·북 등 호남이 25명으로 막강막하의 세를 과시하며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지역 의원 6명이 전원 생략하는 등 총 8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충청권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부의 지역 내 세력 판도가 삼국지 형태로 재편됐다.

일단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호남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호남권 의원들은 언제까지 호남이 불모로 잡혀있어야 하느냐며 지역을 뛰어넘는 리더십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호남과 비호남 출신 간의 '당 대표-원내대표' 역할 분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당권 등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을 보이기보다는 지역별 제휴로 당내의 화합을 모색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투 톱' 자리를 놓고 호남-비호남 간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정세균(전북)-원혜영(경기)', '추미애(서울)-이강래(전북)', '전정배(경기)-홍재형(충북)', 김효석(전남)-김부겸(경기) 등 각종 짝짓기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핵심 인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권과 비호남권의 은근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관측은 의도된 연대가 아니더라도 관세에 따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호남과 비호남으로 배분되는 자연스런 풀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당 뭉 국회부의장 누가 거론되나

통합민주당 지도부 진입에 대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야당 뭉 국회 부의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뭉 국회부의장이 권력을 가진 자리로 보기는 힘들지만 국회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명예로운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부의장은 보좌관과 비서 등

으로 측근 5~6명에게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서 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5인인 박상현 공동대표, 김영진 당선자, 김홍조 당선자와 4인인 문희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표는 1996년과 1999년 국민의회의 원내총무를 지낸 데 이어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서도 원내총무를

박상현 1순위...당권 도전 변수 김영진·김홍조·문희상 물망

역임해 국회운영 사정에 매우 밝은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당권 도전에 대한 미련을 아직은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당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선까지 치러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추대'가 아닌 경우에는 논외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당 안팎의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구 의회 해외연수는 관광성 외유"

이승희 의원 "복지시설 방문 등 알맹이 빠져" 비판

4·9총선이 끝나자 기초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가운데 한 기초 의회의 의원이 의회의 해외연수를 '관광성'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승희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은 최근 자신이 속한 진보신당 광주시당 홈페이지에 "북구의회 해외연수를 불참하며"라는 글을 올려 "구의회에서 지급하는 해외연수 지원금 180만원, 개인부담금 45만

원을 이미 송금한 상태였으나 알맹이가 빠진 해외연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 판단하여 불참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말대로라면 해외연수를 떠난 11명의 기초의원들은 '알맹이 빠진' 관광성 해외연수를 갔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6박8일의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의 시의회 및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었다"면서 "그

런데 떠나기 이틀 전 아동복지시설 방문 계획은 갑자기 취소됐고,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국·공립 시설이 아닌 '방문비'를 내야 하는 사립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는가 하면 당초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이 무려 다섯번이나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수를 떠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주일보

왕만수산업협동조합
 (유)대양
현대종합상조(주)